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시설 추진 놓고 주민 반발

“가축사육 제한구역 사업 즉각 취소하라”

전주시가 보전녹지지역이자 가축사육 제한구역인 용복동 일대 독배전 상류에 유기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 유치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문태근) 소속 회원 20여명은 12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전녹지지역과 가축사육 제한구역 하천구역이 겹치는 청정지역에 추진 중인 부적절한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현장을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수렴 없이 추진된 데다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등이 먼저 이뤄진 뒤 전주시의회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다며 ‘특혜성 조례’ 의혹을 제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용복동 537-5번지 일대로 보전녹지지역이면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고, 독배전 상류 하천구역과 맞물려 있어 시설 입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 및 환경 검토가 필요한 곳이다.

대책위는 “전주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지 않고 특정 장소를 고집하고 있다”며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권과 재산권도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 개정 과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26일 공포한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정 사업자를 위한 사후적 조치 아니냐는 것이다.

대책위는 “전주시는 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교부 결정 등 행정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조례를 개정했다”며 “결과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유기동물 보호시설 유치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문태근) 소속 회원 20여명은 12일 오전 전주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유치 반대 대책위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 제한·하천구역 등 겹치는 지역에 추진 중”

“예외 허용 조례에 답야”... ‘특혜성 조례’ 의혹 제기

전주시 “마을 주민 입장 청취, 법적 위반 여부 검토 중”

뒷받침하기 위한 특혜성 조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초 식물 관련 시설(곤충) 건축물로 허가받은 건물을 유기견 가축 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와 관련한 하천법상 절차, 보전녹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 동물 보호시설 신고 요건 등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가 과거 법인 등기상 반려동물 화장장과 수목장 등 개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기재했다가 최근 이를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사업의 당초 목적과 현재 추진 내용이 무엇인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문제는 악취와 소음 분포 등으로 인한 생활

환경 피해다.

대책위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업을 즉시 취소하고 현장을 원상복구하기 바라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아닌 적합한 장소에 이전하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백수 대책위 대변인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예외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허용하는 조례가 그대로 존재한다면 이번 사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 아닌 적합한 부지로 이전하고 해당 조례 역시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현재 독배전 상류를 따라 위치한 6개 마을 주민들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관련 주민 규모가 5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되는 동안 해당 시설에서 이미

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 조성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현재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듣고 있으며, 관련 사업 과정에서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마을 주민들과 계속 협조하면서 어떻게든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유기동물 보호시설 관계자는 “개와 고양이는 가축이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라며 시설의 성격에 물려난 일부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통상 축산업과 관련된 산업동물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알고 있다”며 “법적으로 개와 고양이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과거부터 개나 고양이를 가축으로 인식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유기동물 보호시설 자체가 반드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이 잘 운영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노력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민들이 무작정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현재는 시설을 돕는 입장에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변호사나 관계자들과 논의한 뒤 필요하면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기관 기술지원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대기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측정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2일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기관 기술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14개 시·군 담당 공무원과 대기환경측정소 유지보수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측정소 유지관리와 정도관리 기술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대기환경측정망 장비의 정도관리와 기술점검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정도관리 평가 시 주의 사항 △측정소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정자료 신뢰도 향상을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운영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신반기 간담회가 측정소 예산 운영과 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원 등 기본사항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하반기 간담회는 실무자의 숙련도를 높이고 현장 평가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도내에는 도시대기 42개소, 도로변대기 2개소, 대기종금속 2개소 등 총 46개 대기환경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다. 측정소에서 수집한 자료는 대기질 예·경보 등에 활용되며,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민에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선관위, 전당대회 관련 ‘불법 전화방’ 등 신고 건 기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기된 ‘불법 전화방 의혹’과 ‘황명선 최고위원이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 캠프에서 조직적 선거 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심사 끝에 모두 기각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관위 공명선거분과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황 최고위원 신고 건은) 소명 자료를 받아 기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황 최고위원은 김민석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직함을 달았다는 의혹으로 신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가 추가 입증 자료를 살펴봤지만, 캠프 형태의 사진 자료 외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 또 “전진숙 (의원과 관련된 신고)건도 녹취록을 직접 다 들어가면서 판단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문제가 안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최고위원과 전진숙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신고건은 볼 다 기각이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후 선관위원장이 의결을 했다”고 했다.

앞서 정청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측은 전날(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전남광주 북구를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오늘 중 (당)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 비로잡습니다

0... 본보 8월 12일자 2면에 게재된 ‘전북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에서 KB기업은행 부행장은 오정순이 아닌 ‘오은선’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0... 같은 발행일자 16면에 게재된 ‘지구 반대편에서 온 특별한 손님들...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에서 ‘지구커 피 로스팅’으로 부제목의 오타 일부를 수정합니다.

로봇 상용화의 이정표

국토부,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안 마련

오늘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서 설명회

국토교통부(장관 김운덕)는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동로봇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회 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실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중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이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의미한다.

최근 이동로봇과 관련한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과 성능의 발전과 함께 로봇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과 기반시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건축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 공간 건설현장 등 국민의 생활공간과 산업현장에서 이동로봇이 원활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시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교

통·생활 기반시설에 관한 제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동로봇이 다양한 국민의 일상공간에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 특별법안’의 조속한 발의 및 제정을 지원하고 있다.

법안에는 로봇 활용과 맞지 않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실외공간·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동로봇이 제한된 실증 공간을 넘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로봇산업의 사업화와 서비스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이동로봇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동로봇의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동로봇의 사고시 책임과 사고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동로봇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최고위원 ‘김관영 제명’ 두고 또 진실공방

김 전 지사 비상장계 과정 놓고 친청·친명계 입장 차

친청 박규환 “정청대가 제명 강행? 전혀 사실 아냐”

친명 황명선 “강득구, 의결 과정에서 반대한다고 말해”

친청(親청)계와 친명(親名)계가 12일 지난 6·3 지방선거 공천국면 당시 김관영 전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의 비상장계 과정을 놓고 재차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강득구 최고위원이 김 전 지사의 제명 결정 과정이 정청대 당시 대표에 의해 강행됐고 본인이 반대해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저 포함 일부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소명을 들은 후에 제명을 결정하고 했다. 그러나 정 대표를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박 최고위원은 “(당시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보고서에 김 지사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가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일문일답이 이뤄진 것을 더 이상 굳이 소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해 합의에 의해 의결 절차에 들어갔고 단 한 분의 반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당

시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긴급하게 하자는 것에 대해선 저 자신도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았다”며 “‘형직 지사이니 우리 회의에 와서 본인 소명할 수 있도록 들어보자, 그렇게 하고 판단하자’(고 주장했으니) 그게 목적이 됐다. 그리고 강 최고위원은 반대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모두가 원샷으로 제명처리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 당시 상황이 긴박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김 전 지사의 소명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판단하고 했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다만 워낙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의결 자체가 스피디하게 (빠르게) 이뤄졌다”며 “제 기억에 강 최고위원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했다”고 했다. /김재훈 기자

국토부,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에서 ‘시범운용구역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UAM 사업을 준비 중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80여 명이 참석하며, △시범운용구역 지정 추진 계획, △운영체제 작성 가이드라

인,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시범운용구역은 UAM 초기 상용화를 위해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고층 빌딩단지, 아파트길 등 실증사업구역에서는 교통관리체계 등 핵심기술을 검증해 왔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

기 위해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본 신청에 앞서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해, 공역, 배터리포, 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하여 UAM 서비스 모델과 배터리포 구성, 운항 방식, 운항횟수 등 시범운용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이만호 기자